

제7호(2012.1.18)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과제

박 대 식 마 상 진

1.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현황	3
2.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	5
3. 다문화가족에 대한 농어촌주민들의 인식	10
4.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과제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용 문의: **박대식** 연구위원 02-3299-4345 pds8283@krei.re.kr
자료 문의: **원동환** 전문원 02-3299-4274 wondh@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 약 ◇

농어촌의 여성결혼이민자 수는 200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06년에 최고를 기록한 후 대략 매년 7~8천명 수준에 달하고 있음. 국적별로는 현재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고 다음이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의 순임. 2010년 결혼한 농림어업종사자 중 34%가 외국 여성과 혼인하였으며, 농어촌지역 전체로는 외국 여성과의 결혼이 16%를 차지하였음.

농어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농어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집안 일이 많아서 농어업 일을 부담스러워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어 하고 있었음.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경제 수준은 대부분 열악하여 과반 수 이상이 연간 가구소득 2,000만원 미만이었음. 농어촌 여성결혼이민자 중 적지 않은 수(27.7%)가 남편이나 시어머니 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각종 폭력을 경험한 비율도 상당 수준이었음.

농어촌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주로 가족·친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 이해, 자녀교육 상담 및 지도, 직업훈련 및 취업교육 등이었음. 다문화가족의 심리적 안정 수준은 양호하였지만, 자아존중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농어촌주민 대다수가 다문화가족과의 관련 경험이 있으며, 거주하는 마을에 다문화가족이 있는 경우는 2/3가 넘었고, 친척 중에 다문화가족이 있는 경우는 20% 수준이었음.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는 ① 다문화가족을 건강가족의 육성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하고, ②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며, ③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통합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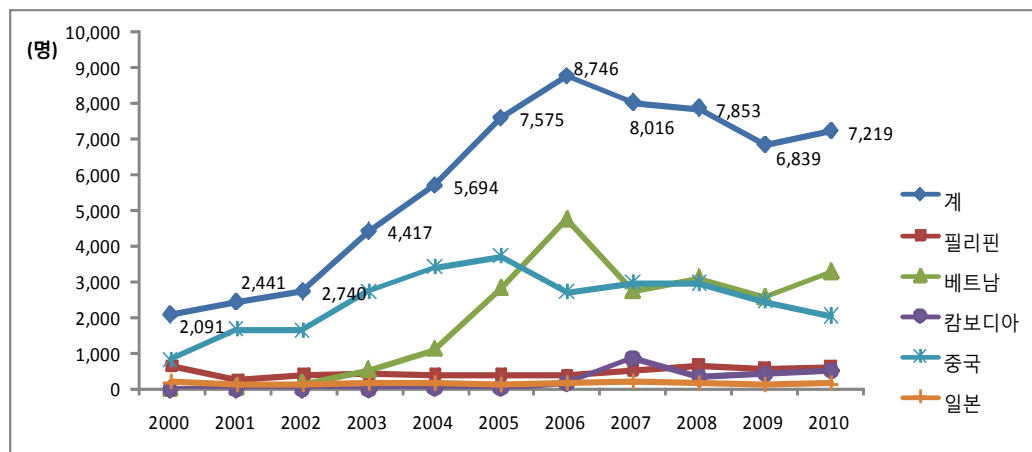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①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영농교육 개선, ② 한국어교육 개선 및 방과 후 교육지원, ③ 다문화가족의 영농기반 구축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①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②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육성, ③ 농식품 관련 산업에서의 경제활동 지원, ④ 사회보장에서의 차별 해소 및 사회서비스 확대 등이 필요함.

1.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현황

농어촌 여성결혼이민자 수는 2006년 이후 연간 7~8천명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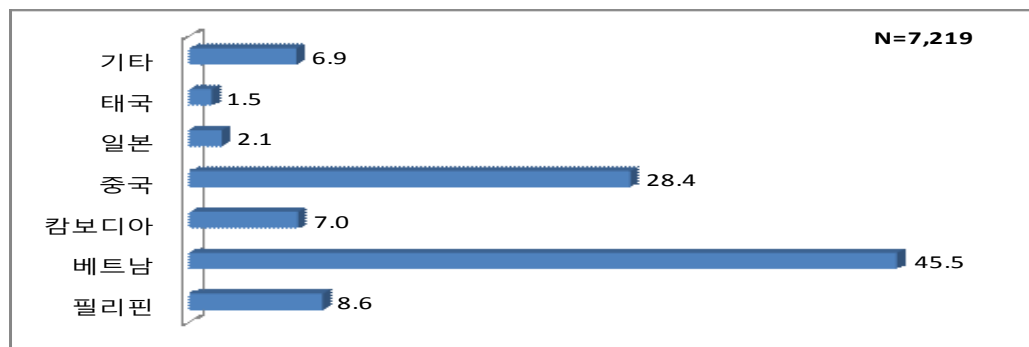
- 농어촌(읍·면)의 여성결혼이민자 수는 200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06년에는 8,746명으로 가장 많은 수가 유입
 - 그 후 점차 감소하여 2009년에 6,839명으로 줄었다가 2010년에는 7,219명으로 다시 상승 추세
- 2010년 현재 농어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별 분포를 보면, 베트남(45.5%), 중국(28.4%), 필리핀(8.6%), 캄보디아(7.0%) 등의 순
 - 2005년까지는 중국 출신이 많았으나, 2006년 이후에는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은 편
 - 베트남 출신은 2006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2007년에 전년보다 42% 감소하였으나, 2009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
 - 캄보디아 출신은 2007년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후에 감소하다가 2009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

그림 1. 국적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어촌 유입 건수 추이(2000-2010)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혼인·이혼 통계

그림 2. 농어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 분포(2010년)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혼인·이혼 통계

주: 기타에는 태국, 몽골, 네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등이 포함됨

2010년 결혼 농림어업종사자 34%가 외국 여성과 혼인

- 2010년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혼인 건수는 도시(동)가 18,605건으로 농어촌(읍·면)의 7,219건보다 많았음
 - 전체 혼인에서 외국 여성과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농어촌이 15.7%, 도시지역은 7.4%
- 2010년 농림어업종사 남성의 혼인 건수 5,971건 중 33.9%에 해당하는 2,023건이 외국 여성과의 혼인이었음
 - 농림어업종사 남성의 혼인 건수 중 외국 여성과의 혼인은 2000년 38.0%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42.5%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2010년에는 33.9% 수준

2.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

사회적응의 개념

- 적응(adaptation)이란 생태학에서 사용하던 개념으로 “생물유기체가 생존을 위해 주어진 환경 조건에 적합하도록 자신을 변용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적응의 개념을 확장하여 주체적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는 인간의 다양한 활동 양상이나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포함시키고 있음
-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이란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족의 일원이 됨으로써 나타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경제적·사회문화적·심리적 측면에서 환경에 적합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는 것”을 지칭함

<조 사 개 요>

-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 전국의 34개 도농복합시 및 군지역의 읍·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400가구(여성결혼이민자 400명, 한국인 남편 400명, 시부모 100명)를 대상으로 2011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함
- 농어촌 주민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현지통신원¹⁾을 대상으로 2011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우편조사를 실시함. 1,920명의 현지통신원 중에서 814명이 응답하였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5건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809건을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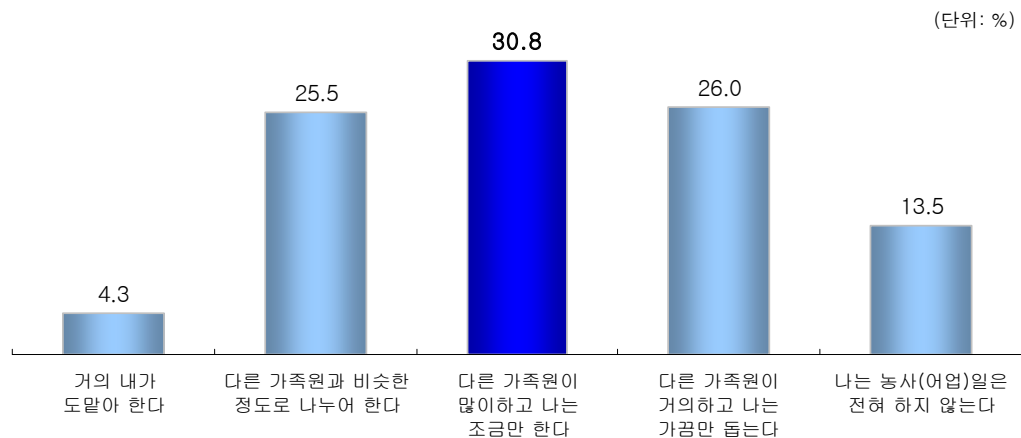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 농촌여론조사를 위하여 위촉하고 있는 피조사자로서 전국적으로 1,920명이 등록되어 있음. 현지통신원이 모두 농업인이기 때문에 농어촌 주민의 의견으로 조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2.1. 경제적 적응

여성결혼이민자 대다수가 농어업에 참여, 경제 상황은 열악

- 여성결혼이민자의 86.5%가 농사(어업) 일에 참여
 - 농사(어업)일을 도맡아 하는 여성결혼이민자도 4.3%에 달함
 -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어업 참여 정도는 생애주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높아졌으며, 농사(어업) 일은 집안 일이 많아서 부담되고 체력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었음

그림 3. 농어촌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어업 참여 정도



- 농어촌 다문화가족에서 농어업은 절대적인 소득원이며, 가구소득은 농가평균 소득을 밑도는 취약한 실정
 -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가구소득에서 농어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75% 이상’인 응답자가 71.0%로 나타남
 - 여성결혼이민자의 15.3%, 한국인 남편의 27.5%가 농어업 이외 소득 활동(직장일)을 하고 있었고, 여성결혼이민자의 향후 농어업 이외 소득활동 참여의사는 37.8%이었음
 -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54.8%가 연간 가구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고, 3,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9.7%에 불과

가구 총소득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만족도에 크게 작용

- 가족·친척의 지지, 가구 총소득, 여성결혼이민자 및 남편의 문화적응 노력 등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농어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만족도 관련 요인(다중회귀분석)

구 분	B	Beta	t	Sig.
(Constant)	1.390		6.898	0.0
가족·친척 지지	0.041	0.211	4.393	0.0
가구 총소득	0.105	0.253	5.466	0.0
남편의 문화적응 노력	0.132	0.132	2.564	0.011
한국국적 소지 여부	-0.150	-0.109	-2.075	0.039
본인(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노력	0.134	0.126	2.370	0.018
한국거주기간(년)	-0.018	-0.115	-2.092	0.037

$R^2=0.209$, Adjusted $R^2=0.196$, $F=16.870$, $Sig=0.000$

2.2. 사회·문화적 적응

여성결혼이민자가 힘들어 하는 가족의 1순위는 남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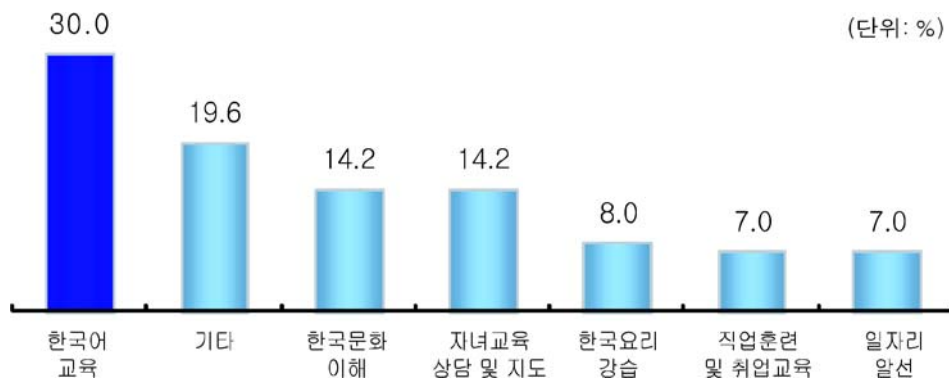
- 다문화가족 중에서 여성결혼이민자와 힘든 관계인 사람이 있는 비율은 27.7%로 나타났고, 상대는 남편(11.0%), 시어머니(8.8%) 순이었음
 - 여성결혼이민자가 지난 1년간 가족들로부터의 각종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16.0%에 달함
- 가정에서의 의사결정 주체를 알아보면, ‘생활비 지출 및 관리’와 ‘가정의 전반적인 경제관리’는 ‘남편이 주로 결정한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52.3%, 51.5%로 가장 높았음
 - 부부가 함께 하는 의사결정은 ‘본인의 사회·문화활동(52.0%)’, ‘자녀의 양육 및 교육문제(50.5%)’, ‘친정 부모님에 대한 경제적 지원(49.0%)’, ‘본인의 취업 및 이직(48.0%)’ 등의 순

-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지지는 주로 가족·친척 중심이며, 그 다음이 친구 및 이웃에 의해서 일부분 이루어지고 있었음
 - 친구 및 이웃으로부터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은 ‘서로 오가며 친하게 지낸다(44.0%)’와 ‘나의 속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다 (41.0%)’이었음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한국어교육’

-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는 한국어교육(30.0%), 한국문화 이해(14.2%), 자녀교육 상담 및 지도(14.2%), 한국요리 강습(8.0%), 직업훈련 및 취업교육(7.0%), 일자리 알선(7.0%) 순이었음

그림 4. 농어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요구



-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다중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베트남 출신보다는 조선족일수록, 거주지역이 읍보다는 면지역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문화적응을 잘하고 있음
 - 반면, 사회적 지지가 적을수록,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일수록, 캄보디아나 필리핀 출신일수록 문화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있음

2.3. 심리적 적응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적응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본인의 문화적응 노력이 중요

- 다문화가족의 심리적 안정 수준은 남편, 시부모, 여성결혼이민자 순으로 높았음
 - 심리적 안정 척도²⁾의 평균 점수는 여성결혼이민자 3.40점, 남편 3.45점, 시부모 3.45점으로 나타나 여성결혼이민자가 남편이나 시부모에 비해서 다소 낮았음
 -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심리적 안정 수준이 높은 반면, 남편과 시부모는 가족형성기(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거주 2년 이하 시기)에 가장 높았음
-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정 수준은 본인의 문화적응 노력이 많고, 사적 관계에서의 지지가 많으며, 한국거주기간이 길고, 거주지역이 먼 지역일수록 높았음
- 다문화가족의 자아존중감³⁾은 여성결혼이민자, 남편, 시부모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자아존중감 척도의 평균 점수는 여성결혼이민자 2.77점, 남편 2.72점, 시부모 2.68점 수준임
 -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반면, 남편과 시부모는 가족형성기(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거주 2년 미만 시기)에 가장 높았음

2) 한국 일반정신건강척도(KGHQ)를 참조하여 개발한 10개의 4점 척도(‘항상 경험’ 1점, ‘자주 경험’ 2점, ‘가끔 경험’ 3점, ‘전혀 경험 안함’ 4점) 문항으로 조사된 것으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9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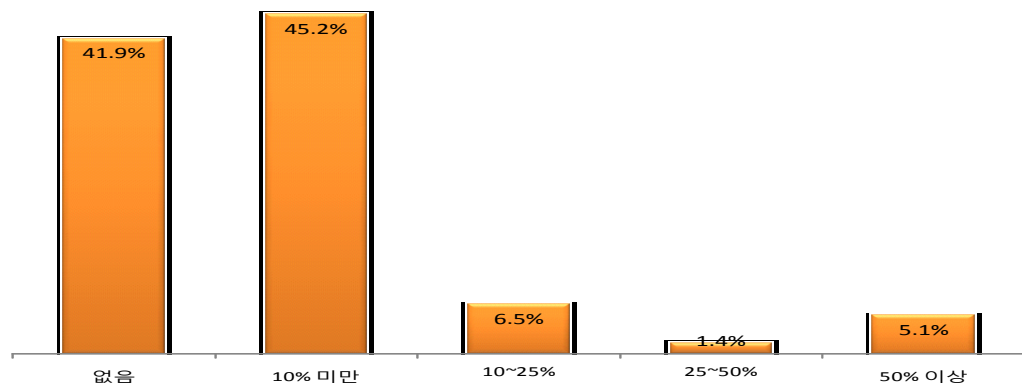
3)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척도를 기반으로 개발한 10개의 4점 척도(‘전혀 비동의’ 1점, ‘별로 동의 안함’ 2점, ‘다소 동의’ 3점, ‘적극 동의’ 4점) 문항으로 조사된 것으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0.82임

3. 다문화가족에 대한 농어촌주민들의 인식

□ 농어촌주민 대다수가 다문화가족과 친분 경험

- 농어촌주민 대다수가 다문화가족과 접촉하거나 대화하는 등의 경험을 하고 있었음
 -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농어촌 마을이 2/3 정도이고, 친척 중에 다문화가족이 있는 경우는 1/5 수준
 - 마을의 아동 중 다문화가족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은 높지는 않았지만, 일부 마을(5.1%)은 전체 아동의 반수 이상이 다문화가족 자녀인 경우도 있음

그림 5. 농어촌 마을의 아동 중 다문화가족 자녀의 비율



□ 농어촌주민들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

- 농어촌주민들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족에 대한 농어촌주민들의 인식을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태도,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어촌사회 기여에 대한 태도, 다문화가족정책 확대에 대한 태도 등으로 나누어 설문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응답자 비율이 부정적인 응답자 비율보다 높았음

표 2. 농어촌 다문화가족에 대한 주민 인식

인식 지표 구분	평균 ^a	표준 편차	긍정적 태도 ^b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태도	3.29	0.62	67.0%
다문화가족에 대한 태도	2.61	0.56	84.4%
여성결혼이민자의 농촌기여에 대한 태도	3.51	0.57	80.0%
다문화가족 정책 확대에 대한 태도	3.53	0.50	84.2%

a: 5점은 긍정적 태도, 1점은 부정적 태도(단 다문화가족에 대한 태도는 1점이 부정적 태도, 5점이 긍정적 태도)

b: 평균(3점) 이상자

- 다문화가족에 대한 농어촌주민의 긍정적 인식과 가장 관련이 높은 요인은 ‘여성결혼이민자와 교류’였음
- 주민들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마을주민 중에 다문화가족이 없을수록, 결혼이주여성과의 교류가 없을수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
 - 여성결혼이민자와 교류는 네 가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에, 가족이나 친척 중의 여성결혼이민자 유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4.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과제

□ 기본방향

- 다문화가족을 ‘건강가족 육성’이라는 시각으로 접근 필요
 - 심층면접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다수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신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점을 인정해주기를 바라고 있음
 -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시키고 통합시킬 대상이 아니라 상호 공존해야 할 우리의 동료 및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는 다문화주의적 시각이 필요
 - 다문화가족을 여성결혼이민자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일반 가족보다 조금 특수한 가족의 문제로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이들을 건강한 가족으로 이끌기 위한 넓은 시각의 접근이 필요
-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대책 필요
 - 농어촌 다문화가족은 생애주기, 결혼 전 국적, 농어업 경험 등에 따라서 경제활동이나 사회서비스 수혜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
 - 따라서 농어촌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생애주기를 고려하고 여성결혼이민자 및 남편 그리고 기타 가족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다문화가족 대상 영농교육도 결혼이민자의 영농경험, 기술수준, 학력, 영농기반 등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방식으로 추진 필요
-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통합적 정책지원 필요
 -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통합적 정책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
 - 현재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부처별·기관별로 분산적으로 추진되는 실정이므로, 지역 내에서 이들 사업을 전체 풀(pool)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의 모든 다문화가족들에게 체계적으로 정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 구축 필요

□ 단기적 정책과제

- 여성결혼이민자의 단계별·영농형태별 맞춤형 교육
 -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단계별 및 영농 품목별로 세분화·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이 필요
 - 구체적으로 ① 영농교육을 결혼이민자의 한국 적응단계·품목별로 세분화, ② 영농경험, 학력, 농업기반 등을 감안한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 ③ 영농교육 시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 교통편·교통비 지원, ④ 교육 시기를 주로 농한기로 조정, ⑤ 현장 노하우 중심의 영농교육 강화, ⑥ 농기계·차량의 운전 및 안전교육 실시 등이 필요
-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교육 개선 및 방과 후 교육지원 강화
 -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게 하여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농어업·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한국어 교재 및 부교재를 개발 보급
 - 여성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
 -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활용한 멘토링 시스템 구축
 - 저소득 다문화가족에게 학습지 및 인터넷 강의를 지원하여 농어촌 학생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보완
- 다문화가족의 영농기반 구축 지원
 - 영농정착 의지가 높은 다문화가족에게 농업기반 구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 및 농업 인력화를 유도
 - 농업기반이 취약하거나 규모화가 필요한 다문화가족에게는 농어촌 공사의 도움을 받아서 유휴농지나 임대농지를 알선
 - 농기계 임대 시 또는 농기계 작업 대행 시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농기계자금 등 농업종합자금 지원 시에 우대하는 방안 마련

□ 중·장기적 정책과제

- 농어촌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역농협이 서비스 영역이나 대상 또는 지역 등에 있어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제대로 작동하여 해당 지자체에 적합한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자율적으로 조정
-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중간지원조직 육성
 -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적 기업 간의 정보교류, 역량강화, 정부정책에 대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활성화
 -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에서 전담 중간지원 조직을 육성
- 농식품 관련 산업에서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지원
 -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다양한 음식문화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그들이 체득하고 있는 각종 요리법, 가공·저장법 등을 활용하여 부업으로 연계
 -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식품 및 음식자원을 기반으로 ‘농식품 관련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 다문화가족의 사회보장적 차별 해소 및 사회서비스 확대
 - 사회보장제도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 다문화가족의 각종 사회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다문화가족에게 다양한 언어로 알기 쉽게 제공
 - 대다수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교통 소외계층이고 주변 도시의 지리에도 밝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찾아가는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KREI 농정포커스」 발행 목록

2012년

- 제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과제 (박대식, 마상진)
제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 (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2011년

- 제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김동원, 박혜진)
제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 (최세균)
제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제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 (한석호, 승준호)
제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 (이용선, 서대석)

KREI 농정포커스 제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과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2. 1. 17

발 행 2012. 1. 18

발 행 인 이동필

편집위원 김정호, 김병률, 김창길, 박시현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